

서독정부의 난민구호 현황



1969. 7

목 차

< 1 > 난민의 정의	1
㉠ 추방민	2
㉡ 피난민	2
< 2 > 피난민의 수 및 성분	2
㉠ 피난민의 연도별 추세	2
㉡ 피난민의 연령별 분석	6
㉢ 피난민의 직업별 분석	7
㉣ 피난민의 지방별 분포	8
< 3 > 피난동기	9
㉠ 정치면	9
㉡ 경제면	10
ㄱ. 동·서독의 월수추이	10
ㄴ. 동·서독의 물가대비	11
ㄷ. 동·서간의 세율비교	13
ㄹ. 동·서독의 생활수준비교	14
< 4 > 구호정책	15
㉠ 구호동기	15
ㄱ. 인도주의	15
ㄴ. 거주지 선택권의 보장	15
ㄷ. 민족감정의 발로	15

㉔ 구호기구	16
가. 정부기구	16
나. 민간기구	16
<5> 구호실적	16
<6> 구호사업의 적극화	20
<7> 구호사업이 독일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	21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비극적 부산물의 하나인 국토양단。 이는 몇몇 당사국의 비극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가장 깊은 정치적 고질이 되었고 분단된 국가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당사국 으로서는 하나의 민족적 숙원이요 국제적으로는 커다란 정치적 이슈가 되어 온 것이다。

분단된 국가들의 통일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역사적 해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그 해결의 시기를 그대로 앉아서 기다릴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분단된 국가들은 각기 국가적 과제로서 국토통일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이다。

이 통일의 문제를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국가는 말할 것도 없이 서독정부이다。

여기서 서독정부가 국토분단이 가져온 제1차적인 과업인 대 난민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정치적 경제적면에서 대 난민정책이 미치는 통일에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난민 구호 대책을 살피는 동시에 동·서독의 경제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1. 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전쟁이나 그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을 말하며 전쟁이나 재난을 피하여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대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피난민이라 부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쟁이

나 재난을 피하여 온 것이 아니라 전후 서독으로 이주해 온 주로 동독주민들을 난민이라 부르고 이것을 다시 편의상 추방민과 피난민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로 한다.

가. 추방민

종전후(1945.3)에 "오더 나이제" (Order Neise)선 이 동지역에 거주하던 수많은 독일인들이 점령군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되었다. 이 쫓겨나온 주민들을 추방민이라 하여 이 추방민은 1949년 8월까지 계속되어 그 수는 약 6,336,314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 피난민

여기서 말하는 피난민은 1949년 9월 이후 동독 및 동독이 동의 지역으로부터 공산동독으로부터 탈출, 자의로 월서해 온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 수는 2백91만7천686명(1949-1967)에 이른다.

2. 난민의 수 및 성분

이들 난민을 이주 연도별, 연령별, 직업별 및 지방별로 살펴보자.

가. 난민의 연도별 추세

1949년 9월부터 1967년말까지의 난민의 수는 다음과 같다.

1945 - 1949(8 월 말)

6,336,314(추방민)

1949	129,245
1950	197,788
1951	165,648
1952	182,393
1953	331,390(동백림에서 자유봉기)
1954	184,118
1955	252,870
1956	279,189
1957	261,622
1958	204,092
1959	143,917
1960	199,188
1961	207,026(8.13 일 백림장벽구축)
1962	21,356
1963	42,632
1964	1,876
1965	29,552
1966	24,131
1967	19,573

총 계 9,254,000

1949년 9월부터 동년 말까지 불과 4개월간에 129,245명이 월서하였다. 이렇게 단시일내에 많은 사람이 동독을 탈출한 것은 서독에 정부가 수립되었음으로 동독에도 불원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독일영토내에 국경아닌 실질적인 국경이 생김으로서 동독내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공포심이 크게 작용한 까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953년에는 전년도(182,392)에 비하여 약 90%나 증가하여 무려 331,39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동년 6월 17일에 동백림에서 공산정권에 대한 들만의 폭발로 자유를 절규하는 국민의 봉기가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봉기의 근인을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알 수 있다.

첫째, 동년 5월 28일에 동독각료회의는 일반 노동자의 생산력을 증강한다는 이유를 내걸어 생산량기준을 종전보다 10%를 올렸다. 종전의 생산기준은 일반 노동자 생산능력의 평균치가 아니라 최고생산자의 능력이 그 표준이었던 것이다. 이 표준이 10% 인상된다는 것은 여타 노동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30-40% 인하 하는 결과의 초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둘째, 식량배급 통제 강화

서독은 공업, 동독은 농업 위주의 분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농업생산물의 저하로 인하여 식량배급의 강력한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이로 인하여 농민은 물론 일반대중의 불만이 우심하게 되었다.

이 농업생산성의 저하의 근본원인은 동독정권 수립후에 실시한 토지국유화에 따라 농민은 고용인부로 전락함으로써 생산의욕이 감퇴된 것이 그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새 제. 삼엄한 분계선 넘어 서독에서의 생활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동독보다 높은수준이 었다.

이러한 점에서 싸이 른 국민의 정당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평화적인 시위를 벌린 동백림서민을 탄압하기 위하여 동독군대는 물론 소군까지 동원되어 무려 1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러한 국민의 봉기가 무력으로 탄압되자 동독국민들로 하여금 잠재해 있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서독으로의 탈출을 감행케 하였던 것이다. 현 서독정부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통일의 날" (Tag der Deutschen Einheit)이라 제정하여 국경일로 삼고 있다.

그후 1961년 까지의 난민은 수에 있어서는 약간의 기복이 있었으나 그칠줄을 몰랐다.

이에 대하여 동독정부는 피난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하여 저 악명높은 백림장벽을 구축했으며 이 장벽은 무려 15 km나 되며 백림사에 더러운 한 Page를 만들어 놓았다.

백림장벽구축후에도 이 장벽너머의 자유를 찾으려던 동독인이 무려 151명이나 무참히 사살되었다. 이 장벽이 구축되기 전에 탈출을 서두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피난민의 수는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동독정권은 백림장벽구축후 탈출예방에 안간힘을 다 하였다.

즉, 동·서독간 분계선의 경비를 더욱 강화하는 일방 동독인의 서독 방문을 극도로 제한하였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동독인에게서 분계선 월경시에 필요한 신분증을 회수하였으며 특히 동독 군인 및 경관의 가족의 서독여행을 일체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로서 1962년에는 전년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동독인이 생명을 건 모험을 감행하여 월서하였다.

이렇게 하여 1949년부터 1967년까지 서독에 도착한 피난민 총수는 2,917,686 명에 이르렀다. 이들중에 558,638 이 Order No-ise 이동에서 온 피난민이고 보면 잔여 2,359,048 명은 동독에서 피난한 것이 판명된다. 1968년 4월 30일 서독정부의 집계에 의하면 추방자 및 피난민의 총수는 9,254,000 명에 달하며 서독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나. 난민의 연령별 분석

이상의 피난민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15세 이하가 2,079,000 명으로 전체의 22.46%이며, 16 - 20세가 658,000 명으로 7.11%, 21 - 40세가 2,230,000 명으로 24.09%, 41-65세가 3,049,000 명으로 32.94%, 65세 이상이 1,237,000 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을 독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41-65세 까지가 16.8%를 차지하여 제일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인 수	그 중 남 자	전 체 인 구	자 체 인 구
	(단위 1,000명)	(단위 1,000명)	대비 (%)	대비 (%)
15세~이상	2,079	1,082	15.60	22.46
16 " ~ 20 세	658	347	16.50	7.11
21 " ~ 40 "	2,230	1,131	14.00	24.09
41 " ~ 65 "	3,049	1,327	16.80	32.94
65 세 이상	1,237	476	15.40	13.36
합 계	9,254	4,363	-	-

이상의 도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총피난민중 부녀자의 수 (4,991,000명)가 남자보다 많다는 것과 21~65세까지의 노동 인구가 피난민 자체내의 57.0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난민의 직업별 분석

다음에 직업별분석을 보면 노동자가 2,094,000명으로서 피난민 총수의 2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노동자생활이 서독에서 보다 떨어짐을 말하고 있다. 이는 피난동기(경제면)에서 상술된다.

난민중에도 54,000이나 되는 실업자가 있는바 이는 완전 실업자가 아니며 직업전환 및 계절실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실질적 수는 미미하다.

직업	인수	자체대비 %	전인구대비 %
자립	236,000	2.50	8.00
가업농업	103,000	1.10	5.00
관리	230,000	2.48	16.90
회사원	968,000	10.47	14.50
노동자	2,094,000	22.62	18.10
기술건설공	127,000	1.37	17.80
상업건설	105,000	1.13	18.70
실업	54,000	0.58	18.40
무직	5,337,000	57.67	16.10
계	9,254,000		

라. 난민의 지방별 분포

가족과 함께 또는 단신 사선을 넘어 월서한 피난민들은 각자 자의에 의하여 연고자 또는 친지를 찾아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정부의 알선에 의하여 거주지를 택한다. 1966년 4월 현재 지방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피난민중 22.82%나 되는 2,297,000명이 서독 중서부에 위치한 "늘드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 지역은 서독의 공업지대로서 취업이 용이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인 "바이에른"으로서 1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별 분포도는 다음과 같다.

주 명	수	자체대비 (%)	전체국민 대비 (%)
놀드라인 웨스트팔렌	2,297,000	22.82	13.7
바 아 에 른	1,773,000	19.15	17.5
니 이 닥 삭 셴	1,663,000	17.8	24.2
바 아 덴 뵐 템 벨 크	1,276,000	13.78	15
헛 셴	873,000	9.43	16.7
슈레스비크 홀슈타인	619,000	6.68	25.6
라 인 란 토 팔 쓰	281,000	3.03	7.8
함 불 크	209,000	2.2	11.5
베 르 린	138,000	1.04	6.3
부 레 멘	111,000	1.0	14.9
사 아 란 트	15,000	0.9	1.3

3. 피난동기

정든 고향과 가재를 버리고 적수공권 남부여대하여 월서하는 피난민의 피난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산치하로 부터 사선을 넘어 자유진영으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산정권에 대한 반발에서 입에 틀림없기는 하나 이 한가지만이 이유가 아니다. 경제적 이유 즉, 생활면에서도 중요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피난동기를 정치면과 경제면으로 분석하여 본다.

가. 정치면

모든 공산주의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공산정권의

국민에게 대한 탄압은 공통적인 것이다. 독일인은 일찍부터 자유주의하에서의 생활에 젖어 있었다. Nazi 독재하에서는 그래도 "국민의 단결만이 독일민족의 유일한 살길이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공산독재 이후에는 소련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반발 즉 반독재, 반쏘의 반발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독주민들은 독재하에서 최대의 인내끝에 최선의 기회를 포착하여 자유에로의 탈출을 꾀한 것이다.

나. 경제면

자본주의사회는 "부익부의 반면에 빈익빈의 현상"이라고 공산이론은 주장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자들은 이러한 모순을 타파한다 하여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며 그 이익을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노동자 자신에게 돌린다는 자칭 노동자를 위한 사회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이 과연 동독에서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는가를 동·서독의 일반노동자의 월수 비교, 물가비의 격차, 노동시간의 격차 세울의 대비를 통하여 생활수준을 비교 검토하여 본다.

그. 동·서독의 월수(月収)의 추이

1960년 부터 1965년까지에 있어서 서독의 월수는 동독에 비하여 크게 상승했다. 이는 서독의 일반물가 상승에 기인한다.

연 도	서 독	동 독
1960	509 D M.	440 D M
61	563 "	458 "
62	614 "	449 "
63	652 "	454 "
64	709 "	467 "
65	773 "	485 "

이상의 비교표에서 동·서독의 월수를 비교하였으나 이 수입의 비교만으로는 일반국민의 생활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쌍방의 물가를 비교하여 본다.

ㄴ. 동·서독의 물가대비.

철저한 계획경제하의 동독에서는 생활필수품이 엄격한 배급제도로 되어있다.

다음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빵만이 동독에서 서독보다 엷가이며 여타 사치품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생활필수품 까지도 동독은 서독보다 고가이다.

밀가루, 버터, 설탕 및 계란은 식생활품중에서도 가장 기본식료품인 바, 동독에서는 서독의 가격의 약 50%나 고가이며 커피(수입품)는 무려 서독의 10배나 된다. 문화생활의 필수품인 전기 소제기는 서독의 2배이상이며 냉장고, TV수상기 및 자동차는 서독의 4배나 된다. 위의 월수 비교에서 본바와 같이 동독에서의 월수입은 서독에서보다 작은배 반하여 물가는 서독보다 월등하게 고가이다. 다음 표에서 동·서독의 명물품가격을 비교하여 본다.

※동·서독의 물가대비표

(DM) 1966년

구분	서독	동독	구분	서독	동독
			남자화	46	48.20
빵 (kg)	1.12	0.52	산사복	152	184
밀가루 (kg)	1.08	1.52	숙녀복	69.80	79.20
설탕 (kg)	1.25	1.64	숙녀부라우스	3.90	12.60
Butter (kg)	7.80	10.	여자양말	2.63	7.50
계란 (kg)	2.00	3.40	전기소제기	168	355
우유 (kg)	9.87	9.80	빙장고	335	1.300
계유 (kg)	8.35	8.	TV	690	1.950
Coffee (kg)	17.80	70.	자동차	4.735	14.800

이상 물가의 격차가 일반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동독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물가차이 때문에 서독의 노동자보다 훨씬 장시간의 노동을 해야된다. 다음은 동·서독 노동자들이 일반생활품을 구입하기 위한 노동시간의 비교이다.

품목별	서독 (시간/분)	동독 (시간/분)
빵	0/16	0/12
밀가루 (kg)	0/15	0/31
설탕 (kg)	0/18	0/39
Butter (kg)	1/52	3/58
계란 (kg)	0/29	1/21
우유 (kg)	2/21	3/53
계유 (kg)	1/59	3/10
Coffee (kg)	4/06	27/47
남자화	10/59	19/08
남자복	36/17	73/10
숙녀복	16/40	31/26
여부라우스	4/03	15/02
백타이	0/56	5/0
여양말	0/38	2/59

㉔. 동·서독간의 세율비교

동·서독간의 세율의 격차와 세금에 의한 동독내의 특권계급에 대한 비호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노동자를 위한다는 자체내의 이론을 전복하고 있다.

저소득자에게도 인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 또한 그들의 주장이었는데 이러한 이념과 주장이 과연 어느만큼 이행되는지를 세제로서 분석하여 본다.

동·서독에서 400 DM의 월수입자의 과세율을 보면 동독에서는 9.5%이며 서독에서는 5.5%이다. 저소득자에 대한 동독의 과세율은 서독보다 4%나 높고 1500 DM 월수입자의 경우, 서독에서는 400 DM 수입자 세율의 3.3배나 되는 18%를 과하는데 반하여 동독에서는 그 배인 20%이다. 또 2000 DM의 월수자의 경우에 서독에서는 21.8%로 누진적으로 그 과세율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동독에서는 1500 DM 수입자의 과세율과 동일한 20%를 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서독에서는 저소득자는 저율, 고소득자는 고율의 과세에 의하여 저소득자들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원조하고 있으나 동독에서는 정 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음이 판명된다.

특히 동독에서 1500 DM 월수자는 당 또는 정부의 고위층인바 이들은 납세면에서만도 벌써 특권층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계급을 타파한다는 그들의 구호를 완전히 전복하고 마는 것이며 이를 표로써 보면 다음과 같다.

월 수 별	서 독	동 독
400 DM	5.5 %	9.5 %
500 "	8.2 "	10.4 "
600 "	10 "	15.3 "
700 "	11.3 "	18.3 "
1,500 "	18 "	20 "
2,000 "	21.8 "	20 "

ㄷ. 동·서독의 생활수준비교

이상 동·서독의 임금대비 및 세율의 대비로서 동독국민 생활 수준이 서독보다 떨어지리라는 것이 예상되나 이를 실질적인 Engel 계수로서 이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구 분	동 독	서 독
식 대	59.4 %	45.5 %
가 옥 대	5.8	9.8
난 방 및 조 명	3.9	5.4
피 복	16.3	13.1
가 구	5.2	8.3
세 탁 및 미 용	2.8	3.2
문 화 비	4.1	9.8
교 통 비	2.5	4.9

이상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동독에서는 식대에 지출하는 비용이 전 지출의 59.4%나 되는 높은 율이며 서독보다 14%나 높다. 가옥대 지출은 서독에서 차지하는 율이 높은바 그 이유로서는 가옥임대료의 고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을 더욱 안

일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함을 말하는 것이다.

교통비를 보면 서독에서는 전 지출에서 4.9%를 그리고 동독에서는 불과 2.5%를 지출하고 있는바 서독에서의 교통비의 교통비는 서독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문화비 지출은 서독에서 9.8%임에 반하여 동독에서는 서독의 반에 미달하는 4.1%에 불과하다. 이상으로 보아 서독인이 월등 높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음이 증명된다.

4. 구호정책

가. 구호동기

ㄱ. 서독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광범한 피난민 구호사업은 우선 민주주의 근본 원리인 인도주의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피난민의 대부분이 독일인이지만 독일인 이외의 타 민족에 대해서도 역시 구호의 손을 뻗히고 있다.

ㄴ. 서독정부의 구호사업은 대내적으로는 서독인에게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며 대외적으로는 동·서독을 비교하게 되는 선전효과도 노리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는 전 독일인의 거주지선택자유권의 보장을 말하고 있다.

ㄷ. 또한 이 사업은 독일인 본연의 민주적정신에서 일어나는 표현의 하나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분단된 국토에서 동에서 공산정권을 뿌리치고 사신을 알몸으로 넘어온 피난민의 구호를 서독인들은 하나의 의무처럼 느끼고 있다.

나. 구호기구

7. 정부기구 - 그런데 이 900 만명에 이르는 피난민을 구호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청되는바 이의 전담기구로서 추방민, 피난민 및 전상자성 (Ministerium für Vertriebene, Flüchtlinge und Kriegsgeschadigte)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속칭 피난민성이라 불리운다.

동성은 3국 25과로 되어 있으며 제1국 (10과)은 인사, 경리, 국회 및 정부 타부처와의 협조 등의 업무를 맡고 제2국 (9과)은 경제문제, 주택문제, 행방불명자 심인활동, 이주관계 등의 업무를 맡고, 제3국 (6과)은 법제, 동독내 정치범 보호문제, 사회문제 등을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전독분계성의 피난민 구호사업의 활동은 재정적 활동보다도 난민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 파악, 피난민성과의 횡적 협조를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민간기구

국토분단에서 빚어지는 피난민의 구호사업은 정부의 사업에만 맡기지 않고 범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서는 독일통일촉진위원회를 비롯한 각 정당, 적십자사 및 계종교단체를 들 수 있다. 이 민간기구의 피난민 구호사업에 관하여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5. 구호실적

전기의 피난동기에서 본바의 이유로 적수공권, 국경선이 아닌 엄연한 분계선을 생명을 걸고 월서한 피난민들에게 서독정부는 그들이 월서하는 즉시 그들의 신분조사를 완료하고 그들은 서독민과 동등한 법적대우를 받고 보호된다.

이들 피난민들은 정부 주선에 의하여서 직장을 얻고 친지 또는 희망 행선지까지의 여비지급도 받는다. 월경지에서는 임시숙소 및 급식이 지급되고 있으며 동독에서 획득한 제자격은 그대로 서독에서 인정받으며 서독에서 취업시 원주민과의 차별대우는 있을 수 없다.

피난민 구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독정부는 1949년 9월 1일에 긴급구호법^①을 제정하였고 1952년 9월 1일에 부담균형에 관한 법^②등을 제정하였다.

구호사업은 연방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하여 시행된다.

1949 ~ 1966년간에 총 5,084 백만 DM (긴급구호법 및 부담균형에 관한 법에 의한 재원은 제외)을 지출했으며 연도별 지출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① 난민 도착즉시 필요한 제반구호와 행선지까지의 체여비 및 취업시까지의 최소생활비를 지급한다.
 - ② 난민들이 실향함으로써 이러한 재재산의 망실을 전국민이 분할 부담하자는 취지

(단위 : 백만 DM)

연 도 별	지 방 정 부	연 방 정 부	총 계
1949 ~ 50	44.5	14.5	59
51	84.0	37.0	121
52	93.0	28.7	121.7
53	65.4	27.2	92.6
54	94.9	33.8	128.7
55	91.5	86.2	176.7
56	66.9	111.8	178.7
57	66.1	148.0	214.1
58	69.2	217.1	286.3
59	54.7	246.3	301
60	92.0	306.0	398
61	83.0	376.5	459.5
62	121.7	325.7	447.4
63	144.5	365.5	510
64	193.8	404.0	697.8
65	168.4	372.1	540.5
66	140.3	310.1	450.4
계	1,673.9	3,410.5	5,084.4

이상의 재정적 원조에서 지방정부의 부담율은 32.7%이며 연방정부가 67.3%를 부담하고 있다.

이 원조는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취급된 것이다. 다음은 긴급구호법 및 부담균형법에 의거한 재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구호사업의 내용을 살펴본다.

서독정부는 추방민에 대하여는 특별한 고려를 하여 그들이 약탈당한 재산 (부동산, 저금, 가구등)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바 1966년말까지 122억 8천 3백만 DM를 지불하고 양로비 및 생계비로서 143억 97백만 DM, 교육비로서 8억 8천 9백만 DM등을 무상으로 구호했으니 그 제는 총 274억 6천 9백만 DM이다. 상공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으로서 13억 9천만 DM, 피난 농민의 정착사업을 위하여 18억 3백만 DM을 지출했다. 그리고 주택비로서 80억 1천만 DM을 용자했다.

이상 구호실적중 무상구호액은 275억 6천 9백만 DM에 달하고 추방민에 대한 제구호비는 총 399억 6천 9백만 DM이다.

동독으로부터 탈출해 온 자(실질적인 피난민)를 위하여 24억 2천 6백만 DM을 무상으로, 상공업자를 위하여 3억 2천 1백만 DM, 농민을 위하여 1억 3천 7백만 DM을 용자했으며 피난민들의 주택을 위하여 4억 3백만 DM을 용자했다. 그밖에 용자를 합하여 18억 9백만 DM을 지불하였다.

이상 제구호내용을 무상구호, 망실재산보상 및 자립부조 용자등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무상구호비는 156억 8천 4백만 DM이며 전체의 38%에 해당한다.

망실재산 보상비는 127억5천5백만 DM이며 전체의 31%, 상공업자립원조용자는 36억5천1백만 DM이며 전체의 9%, 주택전립용자는 84억1천3백만 DM이며 20%, 그리고 그밖의 구호비는 12억7천5백만 DM로 3%에 달한다.

그리고 전체 총계는 417억7천8백만 DM이다.

이상 재구호 실적을 일람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 DM

구분	추방민	피난민
재산보상	12,283	472
양로비	14,397	223
교육비	889	175
상공업자원조	139	321
농민정착	1,803	137
주택비	8,010	403
기타	9,654	78
총계 : 41,778	39,969	1,809

이상은 1949-1966년간의 서독정부가 실시한 피난민구호사업 실적이다.

6. 구호사업의 적극화

서독정부는 1969년 5월 14일에 이 사업의 적극화를 위하여 동구호법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69년 10월 1일부터 1970년 9월 30일까지 약 6억 2천 5백만 DM의 구호금을 책정하였다.

7. 구호사업이 독일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

월서한 피난민의 생활수준이 동독에서 보다 높고 자유주의하에서의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동독국민들은 자유사상을 한층 더 그리워하게 된다.

이렇게 경제적 우위와 민주체제하의 서독은 동·서 양독 자유총선거에서도 승리를 걸우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 참 고 서 >

1. 백행걸 : 양단된 국가의 통일문제, 대한공론사 1968
2. AUSKUNFT ÜBER DIE SOWJETZONE DEUTSCHLAND (쏘 집령하의
독일에 관한 소식) 전독문제성 1966
3.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연방정부보고서) 1967
4. IT HAPPENED IN JUNE 1953
(1953년 6월에 일어났다) 전독문제성 1969
5. DIE ORIENTIERUNG (방향잡이)
6. STATISTISCHES JAHRBUCH 1968
(1968년 통계연감) 독일연방통계청 1969
7. DEUTSCHLAND HEUTE
(금일의 독일) 독일연방정부공보실 1968
8. WOHLSTAND FÜR ALLE
(전 국민을 위한 복지) L. 에아할트 1965